

## 신영복과 분단, 통일 문제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신영복이 자본주의 체제, 관계론 패러다임과 21세기 문명의 대안 등에 대해서는 기존 출간된 여러 저서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분단체제, 통일문제에 대해서 쓴 글은 거의 없다.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야 당연히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할 수 없었을 것이고, 출옥 후 쓴 여러 편의 저서에서도 체계적으로 생각을 정리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최근의 저서인 『강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몇 줄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살펴보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한편 그가 투옥되기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으며, 출옥 후 90년대 이후 들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 아마 본인은 나름대로의 일관되고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분단의 한 결과라 할 수 있는 '통일혁명당' 건으로 20년 수형생활을 한 그로서는 자본주의 경제 문제보다 건드리기 더 어려운 주제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출옥 후 정운영과의 대담에서 “우리시대의 가장 첨예한 모순의 한 복판을 몸으로 체험했다”고 실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단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기존의 대답이나 몇 편의 논평을 기초로 해서 그의 생각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우선 60년대 당시 20대였던 신영복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 진보적 청년들의 일반 경향을 생각하면서 좀 더듬어 보고 싶다. 우선 그가 한번 실토한 적이 있지만 밖으로 알려진 거창한 ‘통일’혁명당의 청년 간부로서 보다는, 강한 지적 호기심과 학구열을 갖고 있었던 소장 경제학자, 정치지향성을 갖고 있었던 60년대 중반의 청년 학생운동 씨클의 간부로서 그가 처했던 입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그는 정운영과의 대담에서 당시 그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서는 정치경제학을 비롯하여 철학적 논리, 역사적 관점, 인간의 소외문제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지적 광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실토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일반 청년이나 학생들과는 달리 마르크스-레닌주의, 그리고 모택동 사상 등을 학습했으며 그것이 당시의 그의 생각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 문헌과 북한사회에 대해 신영복과 당시 운동권 젊은 이들이 어떻게 읽고 생각했는지 알기는 어렵다. 냉전체제가 고착화된 70년대 중반 이후와 달리 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출간된 소설 등도 접근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어느 정도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모든 이념지향적 학생, 청년들에게 북한, 분단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다. 대체로 북한 혹은 분단 문제를 둘러싸고 운동진영 내에서 사상적 입장에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이고, 아직 산업화 단계에 있었으며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이질화가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았던 70년대 말까지는 생각이 미분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학자나 운동가들은 80년대 중반이후의 시각으로 6,70년대 사람들을 조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말하자면 사구체 논쟁에서 거론된 것처럼 6,70년대 조직사건 중에서 어떤 흐름은 북한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이거나 추종적이었고, 다른 흐름은 애초부터 대단히 비판적이었으며, 어떤 흐름은 한반도 전체의 변혁에 초점을 두었는데 비해 다른 흐름은 남한사회의 변혁에 초점을 두었다는 논리들이 그것이다. 이미 일부 대담에서는 신영복이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필자 역시 그 시대의 주요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80년대식의 도식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60년대 당시 남한의 진보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젊은이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떠한 방식의 통일을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일단은 과시즘적 지배가 훨씬 강고화된 유신이후의 운동권 세대들에 비해서는 60년대의 운동권 청년들이 자주성을 강하게 내세웠을 뿐더러 사회주의 공업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던 당시의 북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60년대 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동베를린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다. 대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간첩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 간첩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남한의 빈곤과 독재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졌다가 그것이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으로 연결되었을 소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당시의 시점이 해방정국의 이념갈등 그리고 한국전쟁이 종료되지 불과 십 수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당시 북한이 공업화를 어느 정도 진척시켰지만 남북한의 체제이질성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으며, 신영복도 지적하였듯이 이념의 시대였던 해방정국으로부터의 거리감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60년대는 여전히 반공의식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까지 착근하지는 않았던 시기이며,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의식도 그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60년대는 70년대말 이후 80년대 중반까지의 '사회과학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어떤 점에서 훨씬 더 자유주의적이었으며, 정치적 비판과 자유로운 이론적 모색의 공간이 열려있었던 시기라 볼 수 있고, 다른 편으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도 제일 뒤떨어진 후진국이었고, 아직 남한 사회의 계급분화가 본격화되기 어려운 산업화 이전의 농촌사회였기 때문에 민족문제의 계급문제의 긴장과 두드러지지 않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영복이 자신의 사상의 형성기인 20대를 보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이후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0년대 이념적, 정치적 학생 청년들은 대체로 한국을 식민지반봉건 사회 혹은 반동회의 이후 이집트, 인도 등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에서 시도된 민족민주혁명의 노선이라는 틀로서 한국을 바라보았던 것 같다. 물론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계급분화가 진척된 80년대에도 이러한 생각을 견지한 지식인들이 일부 있었지만, 아직 한국사회가 후진적 농촌사회였던 60년대는 더욱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가장 진보적이고 문제의식이 투철한 경제학도들 거의 대부분은 농업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젊은 사회학자들도 대체로는 농촌사회를 전공을 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아직 제3세계 종속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이었던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사회과학 주제는 후진성, 반봉건, 매관, 빈곤의 악순환, 민족민주혁명 등이었다. 물론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여러 상이한 접근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 정서적으로는 후발 국가의 처지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민족주의가 강하게 깔려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4.19 이후 5.16 직전에 학생들이 "가라 북으로, 오라 남으로" 구호를 외쳤고, 이러한 민족주의 정서가 이후 굴욕외교 반대를 외친 6.3 학생운동에까지 연결된 것이 그 실례다.

당시 좌파, 진보성향의 청년. 학생들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미국발 근대화론, 로스토우 식의 경제성장론의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렇게 보자면 한반도 분단 문제,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 문제로 조명될 것이다. 어쨌든 반미/민족해방의 사고는

1)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중 “통혁당 사건과 청백” 참조. 무엇보다도 당시는 아직 주체사상이 정립되기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소련의 공식노선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제3세계 민족민주혁명 노선과의 차별성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60년대 의식화된 청년.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고, 신영복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해방이후 정권의 정통성도 없었고, 식민지 경제구조도 그대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부정 부패의 만연, 그리고 광범한 빈곤의 축적은 자본주의적 개발방식의 한계와 모순을 쉽게 느끼게 하였습니다”(정운영과의 대담)라고 당시 한국사회에 대한 그의 사고를 요약해 주고 있는데, 자본주의 공업화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빈곤을 어느정도 자본주의 모델의 실패의 결과로 볼 수 있는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한국,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을 정통성 없는 정권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식민지의 연장으로 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그것은 출옥 후의 사고에도 흐르는 것 같다.

그러나 당시의 시점에서 남한을 어느 정도로 전형적 식민지 상황으로 보았는가, 즉 구식민지상황인 일본 제국주의 지배시기와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혹은 북한을 어느 정도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역’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가의 문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전쟁 후에 남한사회에서 성장했으며, 상당한 정도로 자유주의 정치 문화의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실천을 통해서 반제/민족해방의 사고를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해방정국의 좌파, 빨치산 세대와는 분명히 차별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던 좌파,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은 당시의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을 혁명의 기지로 생각하고, 북한의 모든 정치경제 체제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스스로를 혁명가로 생각했던 당시 구좌파들에게 이것은 지적, 사상적으로 회의할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적어도 20년 이상을 더 수형생활을 하고 80년대 말 이후부터 출옥한, 노인이 되어 세상에 나온 이들의 생각은 거의 변치 않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신영복은 여러 인터뷰나 지면에서 감옥에서 이들 구혁명가들과 만나면서 한국 현대사에 대해 보다 실제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바 있다. 즉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의 기억을 접하면서 “그야말로 피가 통하고 숨결이 배어 있는 역사 그 자체”를 접하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과 나는 인간적 이해와 공감”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를 통해 책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지식 즉 우리 사회를 그 모순구조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확실한 토대를 얻게 되었다고 실토했다. 그의 한문 스승이었던 이구영 등도 그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쨌든 이들 구빨치, 신빨치 등 구좌파 혁명가들은 신영복과 같은 학생운동 세대들보다 더욱 더 확고한 반미/민족해방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남한 체제를 철저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전쟁 후 남한 사회에서 성장한 신영복과 같은 4.19 세대가 이들과 같은 생각을 견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평생 거리를 두고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것은 통혁당 관련 사형수인 김질락이 비록 옥중에서이기는 하나 사상적 동요를 겪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비판하는 글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안병직 등 당시에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사상적 변신을 겪은 사실을 통해서도 전쟁체험, 혁명세대와 이후 학생운동 세대와의 분명한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신영복 역시 분단, 통일 문제에 관한 생각이 출옥 이후 약간씩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그것을 자세하기 확인하기는 어렵고, 단지 급격한 단절은 없었다는 판단 위에서 그의 생각들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그가 흔히 한국에서 민족해방(NL)이라고 불리는 반제/식민지/민족해방/자주독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징후를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일제 이후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의 조건과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에서 드러난다.

2) 지금은 우파의 논객으로 활동하는 모 인사는 감옥에서 이들 빨치산 세대와의 만남을 통해 확실하게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필자에게 실토했다. 처음에 민족해방노선을 반대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였다는 그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지식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지형 자체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완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조선조 말기에서부터 일본의 식민지배구조를 그대로 승계한 소위 미군정 시기를 거쳐 30여년의 군사정권 기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친일, 친미적인 지배구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완고하고 보수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요. 이러한 지배구조는 하나의 체제로서 완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러한 그의 표현들을 보면 한국의 지배구조는 외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형식적으로 한국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외세의 대리자들에 불과하다는 전형적인 NL 적 사고나 드러나는 것은 엿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세계최강인 미국이 사실상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국의 지배구조는 종속적 엘리트층을 만들어 내고, 보수 기독교와 언론이 그것을 뒷받침해준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엘리트 층원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의 본질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해방이후 상당기간 동안 계속된 폴브라이트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이 장학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약 30만 정도의 친미 엘리트가 양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식민모국의 의식으로 피식민지의 엘리트층을 교육한 셈이지요. 지금은 수많은 유학생들이 자기부담으로 그 엘리트 재생산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양산된 엘리트가 우리나라의 각급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요. 친미 보수구조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벽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대북문제, 또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구조는 합리적인 보수구조가 아니지요. 일종의 수구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배후에 미국이라는 외세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최강의 미국이 뒷받침하고 있는 보수구조이지요. 권력은 보수구조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제도 언론권은 한국사회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 언론권은 가장 강한 권력의 소재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권력을 거스르는 일이 한번도 없었지요. 이러한 언론이 한국사회의 담론지형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김명인과의 대담)

한반도 현실을 사실상의 식민지와 유사하다고 보는 그의 사고는 미국에 대한 입장으로 그대로 연결된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비판의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미국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되며, 오늘 한반도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분단은 미국이 가져온 것이며 최근의 핵 위기 역시 북한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당시 맥아더의 핵사용 고려, 이후 남한에 전술 핵을 배치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언제나 미국이 먼저 핵사용을 검토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상태를 지속시키는 가장 일차적인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90년대 이후 북한 경제난 역시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봉쇄의 결과라 본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북한 인권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 북한의 내정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sup>3)</sup> 반드시 미국과 남한 우익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의 보편적인 잣대로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향과도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역사책에는 해방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이 '분단시대(分斷時代)'로 기록될 것이다. 조선시대, 식민지시대에 이어서 분단시대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역사 시기를 분단시대로 규정한다. 이렇게만 보면 그는 역사관은 강만길의 분단시대론,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 별로 거리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강만길의 분단시대론이 우파 민족주의 입장에 가까이 있고,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미국의 책임성 문제보다는 세계 자본주의 하위체제로서 분단체제의 구조적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신영복의 분단론은 이들보다 훨씬 더 민족해방(NL)의 식민지론의 사고에 가까이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안추구에서는 오히려 이들과 근접하는 측면 역시 갖고 있다.

분단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그는 분명히 우파민족주의의 보다는 좌파 민족해방론과 대단히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은 전형적인 민족해방론(NL)과는 약간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 혹은 통일을 각각의 중요성과 의미 어떻게 위치짓는가? 어디에 강조점을 둘 것인가, 어떠한 통일을 구상 혹은 예상하고 있는가, 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등의 쟁점과 연관되어 있다.

우선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약간의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북한 체제가 “자본주의 제국의 적대와 봉쇄, 그리고 중.소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민족자주, 자력갱생의 기초 위에서 사회정치적인 안정과 전후의 경제적 회생을 이룩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경직성, 그리고 그에 따른 관료주의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노정한 일정한 모순을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북한 비교를 하는 마당에서도, “북한의 경우에는 주체성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고립과 정체를 면치 못했다면, 남한의 경우는 개방을 통해서 문화적, 물질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민족의 주체성을 잃고 종속화 되어있다”, “남과 북은 종속적 자본주의와 전시공산주의라는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남북한 양 체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왜곡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주로 남한의 통일론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적화노력 즉 ‘흡수통일’ 노선역시 양 당국이 지난 50년 동안 시도했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호전성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결국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완곡한 형태로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원인이 미국에 의한 북한의 고립, 그리고 북한의 전시공산주의의 측면이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강요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인권, 빈곤 등의 문제를 보는 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일을 보는 데서도 이러한 점은 다시 반복된다. 그는 민족해방론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외세의 배격, 자주성 확보 등과 연관시키고 있다. 통일의 방법 혹은 경로를 남북 정상회담, 북미회담, 북한의 개방, 남북한 당사자의 군축, 비핵지대화 혹은 중립시대 선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공존, 통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남한 자본주의 체제의 연장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단순한 정서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반대하며, 남북 양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점을 강조하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민족해방론의 입장에서 서 있다. 우선 독일 방문의 경험을 통해 독일

3) 북한의 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정문제이다. 더구나 '인권', '자유'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남북 간에 상당한 시각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문제를 교류, 협력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진정을 걱정하는 태도도 못되며 오히려 그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경실련, 1995).

통일이 서독 자본주의의 자본운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미국적 질서의 중하위권에 종속되는 이른바 한국과 같은 과정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탈냉전 이후 개방화 시대라는 이름의 이른바 국제독점자본의 사활적인 공세에 직면하여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그는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는 식의 민족주의적 통일론을 거부하면서 북한이 그 동안 지켜온 자주적인 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있다.

결국 그의 통일론은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민족 공동체 국가건설을 이상으로 두고 있는 점에서 과거의 반제/민족해방론의 기초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그것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는 남북경협을 남한 자본의 진출의 통로로 간주하는 우파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낮은 단계의 흡수통일이라고 비판하는 완고한 민족해방론에 모두 냉전시대의 사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통일을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동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남을 침략하거나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려는 냉전시대의 논리를 동(同)의 논리로 간주하여 거부하면서 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북의 장점’, ‘우리민족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통일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제/민족해방의 통일론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을 구분하고 남북한 군비축소와 북한 경제 살리기, 한반도 비핵시대화,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제를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평화구조의 정착이 전체의 90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는 지적에서처럼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두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물론 비핵시대화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의 입장이나 민족해방론의 입장에 더 많이 기울어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마련된다면 어쨌든 북한도 핵을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민족해방론의 입장보다는 현재 한국 일부 평화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표방하는 평화군축 입장에 좀 접근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전통적 민족해방론과의 이러한 차이는 통일 국가, 통일사회의 대안을 구상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는 남북 2국가 체제의 통일을 항구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자주국가, 민주정치, 민중참여경제, 복지사회, 인간문화, 토지국유 등은 통일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생각의 일단이 나타나 있다.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토지국유를 강조하고, 민중참여경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시장 자본주의를 인정하되 그것의 작동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그러한 통일 후 경제사회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21세기 민족사의 과제를 주체화와 개방이 가져온 극단적 결과를 경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집약한다. 우리 민족이 20세기 혹은 그 이전의 긴 역사적 시기에 어느 한쪽 극단으로 나아가서 계속 비극을 겪었다는 역사인식에 기초해서 그는 일방적인 주체화, 일방적인 개방 어느 쪽도 우리가 택할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주체성을 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민족의 정체성은 지킬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개방화의 경우는 당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던 통일신라와 결국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조 말의 개화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개방성이 문화의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개방화는 식민지화, 종속화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두 축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 점에서 분단 극복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의 극복을 넘어서서 21세기 한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문명론적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민족사적 과제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문명사적 과제와 연결되며 따라서 한반도 발 대안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즉 통일을 민족공동체의 대안, 혹은 21세기 대안 추구의 문제라고 바라보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 전쟁, 분단, 남북한의 대결을 일종의 근대 국민국가/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체제, 서구의 식민지 지배, 초국적 금융자본의 논리의 산물로 바라보고 그것은 지배와 흡수 동화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한다. 즉 60년대식의 반제/탈식민지론이 이제는 탈근대론으로 발전해 나간다. 즉 한반도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20세기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존재론적 패러다임(Substance-centered Paradigm)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론적 패러다임(Relation-centered Paradigm)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한반도의 미래 역시 그러한 문명론적 구상 하에서 진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강대국의 식민지 경영,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는 오히려 빈곤과 실업, 부패와 질병을 낳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이 암암리에 우리들에게 자리잡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보면 통일은 이제 반식민주의의 문제는 아니고 근대극복의 차원에서 구상해야할 사안이 된다. 근대의 극복은 그것은 미국 패권주의, 존재론적 패러다임이 기초한 자본주의 문명의 극복이 된다. 그가 주장하는 화(和)의 논리는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서만 모색하는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논리가 된다.

결국 신영복의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원론적 정치경제학에서 관계론으로 발전했듯이 분단 통일 문제에 대한 생각역시 반제/민족해방론에서 근대/국기주의/자본주의 극복론, 혹은 관계론과 화의 사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면 분단문제를 보는 신영복의 시각은 분명히 좌파민족해방론에 기초해 있고, 통일론역시 강만길, 백낙청 등의 진보적 민족주의의 입장보다는 분명히 왼쪽에서 있지만, 신영복과 이들 간의 자이는 계속 좁혀져 왔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에게 흐르는 공통점은 여전히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강한 애정과 집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식민지 시기 이래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에게 탈민족, 탈국가의 대안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독도 문제, FTA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우파들의 침묵과 대비된다. 즉 한국의 민족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좌파, 혹은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의 몫이었고 신영복도 그 흐름 속에 있다.

그러나 신영복을 비롯하여 이들 모두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분단극복의 구체적 내용 혹은 '주체' 설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백낙청과 강만길의 경우에는 분단극복을 위한 남북한 대중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점점 더 그것을 남북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분단극복이 단지 편협한 민족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들 모두의 지적은 의미심장하지만, 현재 미일동맹 강화 이후의 동북아 문제, 북한 인권을 무기로 한 미국의 압박과 북한 내부의 빈곤 문제 등 첨예한 쟁점들, 그리고 남한 내부에서의 분단에 대한 극단적 무관심 등의 현상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논의는 너무 고상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즉 남한에서는 분단이 한국 내부의 계급구조화, 개인화, 파편화에 의해 점점 더 추상적인 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는 이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모든 남한 사람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북한 변수, 분단변수를 어떻게 당면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의제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게 된다. 신영복 역시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70년대 이후 즉 자본주의 본격화 이후의 한국사회에 대해서는 매우 비구체적인 지적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분단론과 통일론의 한계로 남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시대와 조건에 따라 사람의 생각은 바뀌게 마련이다. 냉전의 한 복판에서 남북한의 분단을 보는 것과 현존 사회주의 붕괴, 지구화 시대에 분단을 보는 시각이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던 60년대의 시점에 분단 및 통일을 바라보던 관점과 그것이 완전히 역전된 시기에 갖게 된 관점이 같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복 자신이 지적했듯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바뀌기 어렵

다는 느낌도 동시에 가져본다. 신영복의 분단, 통일에 관한 생각은 변화보다도 60년대와의 연속성이 훨씬 더 크다는 필자의 느낌 때문이다. 특히 사상의 형성기인 20대에 구축된 사고는 이후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성장해온 시대의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삶의 무게를 감당해온 정도만큼, 그리고 시대의 고민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정도만큼 세상을 보는 큰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시대의 과제를 일반적인 용어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역사의 변화 발전에 기여한다. 신영복의 삶과 사상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힘도 그런 것이다.